범야권,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압박 총공세

야7당, 용산서 공동 기자회견 "거부하면 정권몰락 앞당길 것" 여당 "수사뒤 도입하는게 마땅" 윤,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 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범야권은 20일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범야권은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방침이어서 여야간 대치 정국이 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 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 의당 등 야 7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범야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 던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지 오늘로 307일 째"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 야당이 한 마음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 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야권은 여당을 향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 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 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더구나 수 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 권 행사에 나선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 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 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불행한 말로 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처를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고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 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대 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 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해병대 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 결될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 인 25일 시민단체들과 서울 도심에서 대 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 을 촉구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 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 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 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 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 다. 서울=김선욱기자

"5·18 성폭력 피해자, 치유·명예회복 시급"

시의회 5·18특위, 정책토론회 개최 "진실규명 통해 역사 바로 잡아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명 예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을 모색하 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5·18특별위원회정다은(더불어민주당, 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과 성폭력:진실 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 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5·18 성폭력 피해의 복합성과 트라우마:진술과 결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신상숙 연구원은 "5·

18 성폭력의 의미 규정과 트라우마 서사의 집합적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 과정에 성평등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5·18 성폭력 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의 치유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사례를 통해 본 5·18 성폭력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 제로 발제를 한 장임다혜 연구원은 "계엄 군 등의 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5· 18 항쟁에 적극 참여한 여성뿐만 아니라 5·18 성폭력의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 의 증언을 공적 기억·기념의 장으로 초대 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치유뿐 아 니라 발행한 역사의 반복과 성별화된 국 가폭력의 재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고 강조했다.

윤경회 팀장은 '5·18 성폭력 사건 조사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피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5·18 성폭력 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다은 위원장은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 생애에 거쳐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정책토론회가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 관 8간담회실에서 열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신상숙 연구원 (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의회제공

감내해야했던 희생과 고통이 축소되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물론 치유와 명예회

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지

